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강원도의회 기행위 임시회	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경산위 산업국 업무보고 청취	1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강원특별법 조례 첫 심사 돌입	2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의회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순위' 재임용 결정 논란	2
강원도민일보	23면	도의회, 올해 첫 강원아카데미 '지적행복을 위한 미술감상' ...	3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올해 첫 강원아카데미	3
江原日報	03면	“똑같은 작품 감상했는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슬픔에 이것...	4
G1방송	온라인	도의회-G1방송 '제15회 강원아카데미' 개최	5
스포츠서울	온라인	이지영 강원자치도의원 발의, ‘전세피해 예방 조례안’ 상임...	6
신아일보	온라인	이지영 도의원 발의 ‘전세피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7
철원신문	온라인	엄기호 도의원, 강원도 축산업 발전위해 악취저감 사업 등 ...	8
전국지방자치뉴스	온라인	강원도의회, 강원도 축산업 발전위해 악취저감 사업 등 지...	9
이뉴스투데이	온라인	강원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교육 지원 조례 추진	10
스포츠서울	온라인	‘강원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11
세계타임즈	온라인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12
신한뉴스	온라인	원미희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	13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軍 유희부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14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5
江原日報	11면	횡성군의원 의정비 150만원으로 인상	16
강원도민일보	13면	횡성군의원 의정비 '월 150만원' 확정	16
강원도민일보	07면	'수출 늘고 수입 줄고' 강원 무역수지 큰폭 개선	17
江原日報	10면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침해된 흥천 경제 들썩인다	17
江原日報	10면	춘천시 쓰레기처리 특혜논란 업체 부실 단속 도마	18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지역 발전 헌신한 숨은 주역 찾습니다"	18
강원도민일보	16면	동계 전지훈련 메카 속초 전력보강 열기 후끈	19
江原日報	14면	근덕면 주민, 삼척화전 피해보상대책위 구성	19
江原日報	12면	쓰레기통 없었더니 확 깨끗해진 강릉	20

江原日報	13면	"지역발전 기여" vs "설득력 부족"	20
강원도민일보	12면	"삼척 근덕면 화력발전소 합의사항 이행하라"	21
강원도민일보	11면	강원특수교육원 강릉설립 이달 첫삽	21
강원도민일보	13면	송전선로 홍천구간 산자부 승인 주민 반발	22
강원도민일보	15면	화천군 337세대 공공주택 건립 주거환경 개선	22
江原日報	11면	특별법 3차 개정안 원주 핵심의제 또 빠졌다	23
江原日報	16면	'돌봄·교육·주거' 패키지로 지역 소멸 극복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선거구 획정 안 하고 '대진표' 짜는 '정치 코미디'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지역 철도망 사업, 국가 계획에 꼭 반영돼야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사들, 국민과 싸우려 하나	2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전환기 이끌 역량있는 인물로	27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종합 02면



강원도의회 기행위 임시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강원개발공사와 감사위원회 등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종합 02면



도의회 경산위 산업국 업무보고 청취 19일 열린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도청 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진중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종합 02면

도의회 강원특별법 조례 첫 심사 돌입

도민 실질적 수혜 등 당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법 조례 첫 심사에 돌입, 집행부에도 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해당 조례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조례는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 요건,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농지 관리 조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 변경·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강정호(국민의힘·속초) 도의원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검토, 조율을 통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 수혜를 받는 주민에게 조례에 대한 사전 홍보가 없었다는 점이 뼈아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찬성(더민주·원주) 도의원은 "농촌에 대한 기준점에 맞는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며 "민간투자를 했을 때의 실패 사례도 찾아보고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 도의원은 "현재 강원특별법 등으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후 대폭 해제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농촌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당부 사항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순위' 재임용 결정 논란

하위 50% 신규채용 지적 등 우려
"시스템 미확정...의견 수렴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제 공무원 인정정책지원관에 '순위'를 매겨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추진해 의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1월 원주 인터볼고 호텔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계약만료정책지원관 재임용 방법을 공유했다. 의회는 오는 6월,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지원관 6명에 대한 계약여부를 근무실적순

위에 따라 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위 50%는 계약을 연장하고, 하위 50%는 신규 경력 경쟁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회운영위 한 위원은 "의정활동 지원은 시간이 쌓일수록 숙련도가 높아지는 업무 특성이 있다"라며 "1년 반만에 평가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위원도 "직원 6명 모두 만족할 수 있는데, 50% 신규 채용 평가방법 때문에 떨어뜨려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02월 20일 (화)

종합 04면

지난 14일 열린 의회 운영위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안정적인 인사운영이 올해 사무처 인사목표 중 하나인데, 이같은 평가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개선을 당부했다. 이번 건에 대해 김종욱 도의회 사무처장은 "상위 50%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성과를) 자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부터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계약 임기는 2년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을 두고 있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인물 23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한창수·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강원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했다.

서영

도의회, 올해 첫 강원아카데미 '지적행복을 위한 미술감상'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19일 서정옥 아트앤콘텐츠대표를 초청해 '지적행복을 위한 미술감상'을 주제로 제15회 강원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서 대표는 이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자크 루이 다비드 '호라티우스의 맹세', 에두아르 마네 '풀밭 위의 점심식사', 반 고흐 '아를의 반 고흐방',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행위예술, 블록체인상 가장자선 예술 '크립토펙크' 등 7가지 작품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의원 등 요청에 따라 기존 아침포럼 방식을 간편한 식사와 함께 진행되는 '브라운백' 방식의 점심 포럼으로 변경했다. 이날 열린 강원아카데미에는 도의원들과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종합 03면



도의회 올해 첫 강원아카데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 권혁열)와 본보 등이 마련한 제15회 강원아카데미가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김기홍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아카데미 강연은 서정옥 아트앤콘텐츠 대표가 '지적 행복을 위한 미술감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종합 03면

“똑같은 작품 감상했는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슬픔에
이것이 미술이 가진 매력”

서정욱 아트앤콘텐츠 대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낮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올해 첫 강원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박진오 강원일
보 사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
회장, 김기홍·한창수 부의장을 비롯
한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
욱 아트앤콘텐츠 대표가 ‘지적행복
을 위한 미술감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서 대표는 ‘천재들의 미술’부터
‘전통과 규칙을 깨는 미술’ 등 미술의
역사를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면서 미술감상을 통해 지적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공유했다.

그는 “똑같은 작품을 보고 누군가
는 웃고, 누군가는 슬픈 추억에 잠기
는 것이 미술의 매력일 것”이라면서
“미술이 여러분께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또 미술과 함께 행복해지셨으
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제15회 강원아카데미
는 간편한 식사를 곁들이는 ‘브라운
백 포럼’ 방식으로 개최됐다. 강원일
보를 비롯한 도내 언론사, 강원경제
인단체연합회 등이 매월 개최하고
있는 도의회 강원아카데미는 도민이
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4년 02월 19일 (월)

강원

G1방송

도의회-G1방송 '제15회 강원아카데미' 개최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강원자치도의회와 G1방송이 국내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원 아카데미 열 다섯번째 행사가 오늘(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서정욱 아트앤 콘텐츠 대표가 '지적행복을 위한 미술감상'을 주제로,
어렵게 느껴지는 미술을 재미있고 쉽게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열리는 강원아카데미는 사전 접수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명성일보, 연합뉴스 등 50개 언론사 보도

스포츠서울

2024년 02월 19일 (월)

사회

이지영 강원자치도의원 발의, '전세피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세피해자 이사비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이지영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과 전세피해 예방사업,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4년 02월 20일 (화)

신아일보

지역

이지영 도의원 발의 '전세피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덕경 기자

전세피해자 이사비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과 전세피해 예방사업,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누리일보, 정도일보 등 29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9일 (월)

철원신문

자치의정

**엄기호 도의원, 강원도 축산업 발전 위해 악취
저감 사업 등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수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월 19일(수)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축산농가 역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특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제 사용,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2024년 02월 19일 (월)

전국 지방자치뉴스

강원

강원도의의회, 강원도 축산업 발전위해 악취저감 사업 등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수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월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축산농가 역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특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제 사용,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유재호 기자 it8815@naver.com

신아일보, 미디어이슈 등 30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9일 (월)

이뉴스투데이

강원

강원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교육 지원
조례 추진

김경석 기자

김기하 강원도의원(동해2) 대표 발의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동해2).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도내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자동차에 적용된 신기술의 활용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지원 조례가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변화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도에 영업장 소재를 두고 있는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가 자동차 점검·검사시설 등에 관한 교육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의 비율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의 경우(전국 평균 1.4%) 정비소 가운데 개업 5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61%에 달해 전국 자영업자의 5년 내 폐업률 45%보다 16% 높았다.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정비소의 평균 매출도 2017년 5억5900만원에서 2021년 5억1000만원으로 4년 사이 4900만원(8.8%) 줄었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주도 전기차 비율이 2030년 계획대로 86%대에 이르렀을 때 자동차 종합정비소 매출은 올해 대비 82.6%, 전문정비소 매출액은 40.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도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22년 기준 수입차 등록대수가 312만대(총 2535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도로를 달리는 차 8대중 1대는 수입차인 셈으로 수입차 대부분이 고급 승용차인 경우가 많아 정비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550여개소에 이르는 도내 정비 업체들의 운영에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석 기자 ks191212@naver.com

스포츠서울

2024년 02월 19일 (월)

사회

‘강원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지원 조례안’ 안전건설위원회 통과

위기의 도내 자동차정비업체에 지원 나선다



김기하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19일(월) 제3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김기하 의원(동해 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변화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를 두고 있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자동차 점검·검사시설 등에 관한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따르면 전기차(친환경자동차)의 비율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의 경우(전국 평균 1.4%) 정비소 가운데 개업 5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61%에 달해 전국 자영업의 5년 내 폐업률 45%보다 16%나 높으며, 남아 있는 정비소의 평균 매출도 2017년 5억5900만원에서 2021년 5억1000만원으로 4년 사이 4900만원(8.8%) 줄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주도 전기차 비율이 2030년 계획대로 86%대에 이르렀을 때 자동차 종합정비소(정비 공장) 매출은 올해 대비 82.6%, 전문정비소(카센터) 매출액은 40.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도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22년 기준 수입차 등록대수가 312만대(총 등록대수 2,535만대)를 넘어서 도로를 달리는 차 8대중 1대는 수입차인 셈으로, 수입차 대부분이 고급 승용차인 경우가 많아 정비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하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 2020년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로 인해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진 사례에서 보듯이 내연기관 및 전기차(친환경자동차) 모두 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정비업체들이 자동차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적응 및 활용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550여개소에 이르는 도내 정비 업체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빠질 수 밖에 없어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acdck4021@sportsseoul.com

뉴스줌, 누리일보 등 39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세계타임즈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2월 19일 (월)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하고 k-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선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웰니스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강원웰니스관광' 모범사례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럽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한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컨퍼런스」에서 TOP 100 스토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원미희 의원은 “행복과 건강·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은 숲치유·온천치유·한방치유·해양치유 등 많은 치유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맨발걷기 등과도 접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02월 19일 (월)

신한뉴스

지역

원미희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웰니스관광 산업은 강원형 융복합 고부가가치산업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고태우 기자



▲ 원미희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하고 k-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선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웰니스 관광지 지정되어 있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강원웰니스관광' 모범사례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럽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한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컨퍼런스'에서 TOP 100 스토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미희 의원은 “행복과 건강·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은 숲치유·온천치유·한방치유·해양치유 등 많은 치유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맨발걷기 등과도 접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일보, 명성일보 등 34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09년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 원형 복원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대릉 국제스케이트장 철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8일까지 국제스케이트장 공모를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대상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유치 도시는 한국 빙상 스포츠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의 지자체들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유치 신청에 나선 철원군은 공모 사전 준비를 위한 타당성·경제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진행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21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제스케이트장의 철원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철원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중부전선 대표적인 군사지역으로 지난 7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제한돼 왔다. 근래에는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과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따

강원포럼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라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철원군에는 어떤 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5만여 군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빙상장 유치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철원군민들이 하나로 뭉쳐 온 힘을 쏟고 있다.

철원군 인근인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도 국제 빙상장 유치 신청을 했고 인

2024년 02월 20일 (화)

오피니언 19면

역이자 많은 군(軍) 유후부지 활용이 가능해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 성장할 조건이 충분하다.

철원군은 유치를 신청한 자치단체 중 인구는 가장 적지만 유치에 대한 주민의 열

기는 가장 뜨겁다. 혹한의 도시답게 일제강점기부터 전국 빙상경기를 개최했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70~1980년대 철원주둔 군부대에서 겨울내 스케이트 연습을 해 부대별 대회를 개최했고 교육청 주관 초·중·고생 스케이트 대회가 매년 열렸었다. 군 유후부지 활용은 접경지역의 큰 현안이다. 따라서 국방개혁으로 이전한 군

부지를 활용한 국제스케이트장의 철원군 유치는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

軍 유후부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천 서구, 경기 김포시도 가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인 춘천과 원주 역시 국제 빙상장 유치에 나섰다. 춘천과 원주는 국가전략 산업단지 및 기업 혁신파크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은 춘천과 원주의 비상을 응원한다. 그러나 춘천과 원주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개발 기회가 제한적이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철원군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겨울철 대표 휴한기 지

부, 대한체육회, 지자체 등 부처 간 협력 강화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지자체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필자는 도교육청이 강원 유일의 실외 스케이트장인 철원에서 초·중·고 학생 겨울 빙상경기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된다면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성적 향상, 빙상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제스케이트장의 유치를 바라는 철원군민의 염원을 전하며 이 기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통합과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인물동정 16면
석한다.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20일
오전 11시
춘천시 강

원특별자치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
리는 2024년 제1차 인
권위원회 정기회에 참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1면

횡성군의회 의정비 150만원으로 인상

【횡성】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횡성군의회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민주평통 횡성군협의회에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최고 상한인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은 월정수당 210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쳐 월 360만원가량을 받게 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5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인상범위를 결정했다. 유학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3면

횡성군의회 의정비 '월 150만원' 확정

군의정비심의위 최종 의결

횡성군의회 의정비가 월 150만원으로 확정됐다.

횡성군의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진)는 19일 민주평통 회의실에서 심의회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최고 상한인 월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 5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여론과 타 시군의 인상 동향을 고려했으며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인상범위를 결정했다.

횡성군은 횡성군의회에 의정활동비 결정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며, 3월 중 개최할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현철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경제 07면

‘수출 늘고 수입 줄고’ 강원 무역수지 큰폭 개선

전달 기준 3개월 연속 수출 증가
에너지원 수입 감소 전체 전인
전년 대비 적자폭 62.3% 감소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해 석유 등 에너지 수·출입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강원지역 에너지원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4년 1월 강원 수출입동향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원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며 도내 1월 수입액은 5억340만달러로 전년 동기(9억9792만달러) 대비 4억9452만달러(49.6%) 대폭 감소했다. 특히 강원지역 전체 수입의 70.1%를 차지한 천연가스(3억5510만달러)가 53% 줄었고, 유연탄(5283만달러)도 54.3% 감소했다. 이에 강원지역 무역수지는 3억582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월(-8억1219만달러)과 비교해 적자폭이 5억637만달러(62.3%)나 개선됐다.

무역수지 개선에는 수출 상승세도 한몫했다.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1억9758만달러로 전년 동기(1억8540만

달러) 대비 1218만달러(6.6%) 늘었다. 중국 부동산 위기, 유로존 경기 하강, 주요국 고금리 장기화와 함께 러-우 전쟁, 중동사태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강원지역 수출 1위 품목인 의료용전자기는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2위 품목인 면류도 미국과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강원지역 수출증가율은 전국 평균(18%)을 하회했고, 증가율 기준 17개 지자체 중 11위에 머물렀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미국이 강원지역 수출 1위 대상국 자리를 유지하며 전년 동기(3090만달러) 대비 7.9% 증가한 3335만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다 올해 1월 1999만달러로 전년 동기(1572만달러) 대비 427만달러(27.2%) 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 부진과 과도한 예비적 저축 등이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수요 둔화도 우려돼 중국 수출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존재한다.

정우진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0면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침체된 홍천 경제 들썩인다

유소년 농구 슈퍼컵 성료
12개국 4천여명 방문 효과
숙박·음식업소 상권회복
지역소멸위기 대응책 부상

【홍천】홍천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천군과 홍천군체육회는 지난 16~18일 홍천종합체육관 일대에서 ‘2024 아시안 유소년 농구 슈퍼컵’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12개국에서 90개팀 4,000여명의 선수단과 가족이 방문했다. 주최 측은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운영했으며 행사장 인근에는 떡볶이, 어묵, 닭꼬치, 봉어빵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장터와 함께 해외 선수단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특히 대회 기간 지역 숙박·음식업소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만석을 유지하는 등 국제스포츠대회가 상권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군과 홍천군체육회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수도권과의 유리한 접근성, 최신식 체육시설 구축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은섭 홍천군체육회장은 “이번 대회와 그동안의 국제대회 유치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스포츠도 하나의 산업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체육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0면

춘천시 쓰레기처리 특혜논란 업체 부실 단속 도마

【춘천】속보=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관내 시설에서 독점 처리해 특혜 논란(본보 19일자 10면 보도)에 휘말린 업체가 춘천시와 맺은 협약 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시는 위반 사항을 사실상 방치, 관리 감독 부실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2년 12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수탁 운영하는 A업체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협약을 별도로 맺고 2025년까지 관내 처리장 사용을 허락했다.

해당 협약은 'A업체의 수집·운반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 조치'임을 밝히면서 일부 다량배출사

A업체 시와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수거 역할 한정 협약 소규모 업장과 수익 정황... 업체 "법 기준 변경 전부터 거래" 시 "협약 내용 현장 상황 못 담아"...시의회 "계약 해지 사유"

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을 A업체에게 맡기는 대신 관내 처리시설로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A업체가 시에 제출한 2023년 수집·운반 수수료 수금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A업체는 지난해 시 관리대장에 등록된 342개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 종교시설, 병원 등과도 계약을 맺어 별도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 수금 현황에

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확인되는 미등록 업장은 49곳, 연간 수수료 수익은 8,144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법적 면적 기준이 변경되기 전부터 거래해 왔던 업장들의 폐기물 수거를 끊을 수 없어 이어진 것"이라며 "월 몇만원의 소규모 업장들은 수거 비용도 나오지 않아 최저요금 식으로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장에서 배출 권리를 위해 민간 업체에 수거를 맡겨왔고 이미 관내 시설에서 처리됐어야 할 물량이기에 A업체 수거 역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협약 내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의회도 19일 시 문화환경국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협약 위반 정황을 질타했다. 유환규 복지환경위 시의원은 "업체가 협약에 명시된 과업을 벗어난 영업을 해왔고 정확한 계근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0면

“원주지역 발전 헌신한 숨은 주역 찾습니다”

시민대상 후보 26일부터 공모 시, 추천경로 다각화·홍보강화 선정 시 5년 만에 대상자 배출

원주시민대상이 올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원주시민대상은 지역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는 지역 최고 영예의 상이다. 매년 각계 추천, 심의를 거쳐 대상 1명, 본상

2명 등 총 3명을 선정한다. 1997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대상 8명, 본상 20명, 기타 23명 등 총 5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2010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민대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들은 있었지만 심사 결과 적합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원주 최고 영예의 상

인 시민대상 선정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원주시민대상' 후보자 발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보자 공개 모집 기간을 26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정하는 등 기존 40일에서 50일간으로 늘렸다. 또 후보자 발굴에 초점을 맞춰 각급 부서는 물론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한층 더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후보 추천 다각화를 위해 시민대상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개 모집 기간동안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제28회 원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시상한다.

정은일 시 총무과장은 "원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밝히는 숨은 주역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6면

동계 전지훈련 메카 속초 전력보강 열기 후끈

올해 야구팀 19곳 500명 방문

온화 기후·우수 인프라 장점

숙박·관광 연계 경기 활기 기대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속초시가 2월 야구종목 스토브리그와 함께 동계 전지훈련 열기로 뜨겁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동계 전지훈련으로 속초시를 방문하는 야구팀은 중등부 12개 팀 300여 명, 초등부 7개 팀 200여 명으로 총 19개 팀 500여 명에 이른다.

동계 전지훈련은 선수들의 훈련과 여가활동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전력 보강의 기간으로 한해 팀 운영을 위해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이에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온화한 기후로 전지훈련에 최적화된 속초시는 전지훈련 방문팀들이 동계 전지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훈련으로 지친 선수들이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풍부한 먹거리, 온천·워터파크 등의 관광시설과 완벽하게 연계하

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속초시를 방문한 모든 전지훈련 팀이 훈련기간 동안 부상 없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천혜의 관광도시 속초를 즐기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석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4면

근덕면 주민, 삼척화전 피해보상대책위 구성

대책위 “일부에게만 보상 ... 주민간 갈등·반목 초래”

삼척블루파워 “주민 요구한 농업 분야 보상 사례 없어”

【삼척】삼척화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근덕면 주민들이 피해보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덕면 피해보상대책위는 19일 복지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분진으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와 농작물 피해, 관광지 훼손에 따른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피해 보

상을 주장했다.

김동열 대책위원장은 “발전소 측이 맹방마을과 덕산어촌계 등 일부에게만 피해 보상을 해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한 반면, 지역 주민들의 보상 협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을 무시하고 홀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삼척블루파워 측이 삼척시와 맺은 이행각서 및



◇삼척시 근덕면 주민들이 19일 복지회관에서 피해보상대책위를 창립하고, 발전소 건설·운영에 따른 건강 문제와 농작물 피해, 관광지 훼손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이행협약에 따라 사원아파트 신축 및 400억원 투자 등의 조속한 추진과 맹방마을과 어촌

계에 보상한 근거를 토대로 근덕면 전체 보상 및 농업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근덕농협이 2021~2022년 실시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농업·농촌 피해대책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수욕장 관광객 감소로 인한 농외소득 감소 등 누적 피해액이 최소 622억원에서 최대 1,0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삼척블루파워 관계자는 “사원아파트 신축은 상설세계가 진행 중이며, 농업 분야 등은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사례가 없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민진기자 hmj@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2면

쓰레기통 없앴더니 확 깨끗해진 강릉

시·중앙시장상인회 ‘無통U턴 ESG 운동’ 호평
쓰레기 점포로 반납... 동참 가게 인증 패널 부착

【강릉】강릉시와 강릉중앙시장 상인회가 실시 중인 ‘無통U턴 ESG 운동’이 호평받고 있다.

19일 강릉중앙시장과 율화 거리 공원 일대는 눈에 띄게 깔끔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주위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와 길바닥에 어묵 꼬

치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쓰레기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음식물 등을 구입한 점포에 되돌려주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쓰레

기통을 없애고 발생한 쓰레기는 구입한 점포에 되돌려 주는 ‘無통U턴 ESG 운동’이 성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앙시장서 분석점을 하는 이모(67)씨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많이 깔끔해졌다”며 “손님들의 쓰레기를 분담해야 해 번거로움은 있지만 시장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캠페인에 동참하

는 100여곳의 점포에 인증 패널을 부착해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시장 고객센터에서 천연향 제조 체험 등의 혜택을 제공,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양승현 강릉중앙시장 통합상인회장은 “상인들이 쓰레기 처리 부담이 늘어남에도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강릉중앙시장을 전국 제일의 깨끗한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호준기자 gwwhojun@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3면

“지역발전 기여” vs “설득력 부족”

〈군〉

〈군의회〉

이슈현장 인제군 조직개편 갈등

군 역세권 전담업무 등 위해 개편 필요성 강조
군의회 타 지역 사례 들며 한시기구 이용 주장

【인제】인제군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이 군의회의 제동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군은 현재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확대하고 3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열고 있는 제263회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번 상반기 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집행기관(군)의 준비 및 설명 부족과 일부 보고사항 누락 등

이 이유로 알려졌다.

■군의회 조직개편 반대=군의회는 설득력 부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군은 역세권전담 업무를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조직과 정원을 활용한 한시기구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내 군 단위 중 유일하게 3국을 운영하는 홍천군도 역점사업을 추진단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장제를 운영하지 않는 양구군도 역

세권개발 업무를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년 1월1일을 기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보고한 적도 없다며 보고사항 누락 및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부진 시·군에 도내 지자체 가운데 인제군이 포함된 것과 기준인건비 초과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지역발전 위해 조직개편 불가피=하지만 인제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 조직을 미리 만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개국이 각각 5~6개 과를 담당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해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만큼 효율적 행정을 위해 3국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인제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춘천~속초고속화철도의 2026년 개통에 맞춰 역세권 개발 분야를 담당할 전담 부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조직개편의 필요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도 44호선 주변이 위축된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2면

“삼척 근덕면 화력발전소 합의사항 이행하라”

주민 환경피해 심각 대책위 설립
사원아파트 신축 투자 약속 등
시행사측 준공 전 이행 촉구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근덕면피해보상대책위는 19일 근덕면 복지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시행사 측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지역 주변 주민들이 시행사인 블루파워의 당초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대책위를 설립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척시근덕면피해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근덕면 복지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분진과 유해가스 등 환경 피해가 근덕면은 물론, 삼척시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에서 후속 대책 등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는 근덕면 번영회와 체육회, 의용소방대, 재향군인회, 농업관련 단체 등 20여 곳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지난 2012년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각 공정별 공개 등 약속은 물론, 삼척시장과 포스파워, 포스코에너지

지 사이에 합의된 이행각서 이행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울분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화력발전소 시험 가동으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굴뚝 연기로 인해 맑은 하늘이 흐리게 변하는 등 주민들은 매일 굴뚝 연기와 함께 분출되는 엄청난 유해가스와 분진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에 “법적 공증까지 돼 있는 이행각서와 이행협약서에 담긴 각각의 약속들을 발전소 준공 전까지 이행하고, 근덕면에 부지만 매입한 뒤 미착공 상태인 사원아파트 신축 400억원 투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맹방과 덕산어촌계 등의 보상 근거에 따라 근덕면 전체 마을에 대해 즉각 보상하면서 별도의 농어업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발전소에서 약속한 유해물질 저감 시설과 무연탄 하역으로 인한 분진 피해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 참여상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김동열 대책위원장은 “주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삼척시내권과의 연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1면

강원특수교육원 강릉설립 이달 첫삽

시·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200억원 투입 2026년 목표
“교육기회 보장 등 지원 총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릉시는 19일 강릉시청 시민사랑방에서 강원특수교육원 강릉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들이 특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원특수교육원 강릉설립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화 된다.

시는 19일 시청 시민사랑방에서 김홍규 시장, 신경호 도교육감, 정태범 강릉교육장을 비롯한 교육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수교육원 강릉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특수교육원은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노암동 415-2번지 노암초교 제2운동장 내 부지 2838㎡에 2층

규모로 조성, 오는 2026년 3월 개원된다. 특수교육원은 지역 장애 학생들에게 통합교육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특히 강릉의 경우 가족캠프, 가족상담, 여가활동 중심, 안전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애 공감문화를 확산시키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체험을 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힘쓴다.

이날 양기관은 특수교육원 공동활용과 통합교육 증진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신경호 도 교육감은 “특수교육원 설립으로 지역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인근에 강릉남부수영장도 조성되고 있어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규 시장은 “강릉을 비롯해 춘천, 원주에 특수교육원이 설립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라며 “강릉특수교육원이 으뜸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특수교육 증진에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규 시장은 이날 특수교육원과 남부수영장 조성 등 강릉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3면

송전선로 홍천구간 산자부 승인 주민 반발

산자부 홍천구간 실시계획 고시
반대대책위, 군수실 항의 방문
신 군수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홍천지역 주민들이 19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홍천구간의 건설사업을 산자부가 승인한 것에 반발, 홍천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본지 취재결과 서부구간은 총 4구간으로 횡성, 홍천, 양평(일부)이 포함된 1~3구간 사업실시계획이 이번에 승인됐으며,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가평 등 4구간은 이달말에서 내달초 사이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까지 1구간 20.058km 철탑 36기, 2구간 26.574km 철탑 49기, 3구간 21.457km 철탑 44기가 횡성, 홍천, 양평 등에 건설된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가평 목안리 7km 구간은 지중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천 역시 송전탑 피해라도 줄이자는 심정으로 지중화를 요구했다”며 “가평은 되고, 홍천은 안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천군이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계속 희생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대책이나 좀 더 구체적인 입장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가평 목안리 지중화 구간은 이번 송전선로 구간이 아닌, 앞서 변환소 입지를 위한 일부구간으로 민가와 인접해있어 지중화로 계획된 별도 사업 구간”이라고 밝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자체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5면

화천군 337세대 공공주택 건립 주거환경 개선

기획취재 화천군 인구감소 극복 대책 ① 정주여건 개선사업

국방개혁 2.0의 시행으로 육군 27사단이 해체되면서 화천군 인구가 지난 2022년 6월 2만 4000명선이 붕괴된 뒤 1년 6개월만에 2만 3000명선(1월 말 현재 2만 2942명)마저 무너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로서는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인구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민선 8기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인구관련 정책을 2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주택건설

화천군은 민선 8기 정책 목표를 새로운 주택 건설에 맞춰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주민에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군은 먼저 주택건설사업의 첫 단

신읍리 120세대 연내 입주
화천읍 산천어 행복타운 등
간동·하남면 전원주택지 조성

계 전략으로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 현재 군에서 건립을 확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모두 337세대 규모다. 지난 2018년 화천읍 신읍리에 착공했던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주택은 이르면 올해 안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 공공 임대주택은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고 운영을 맡으며 영구임대 20세대와 국민임대 100세대 등 총 120세대 규모로 입주자 모집도 완료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통합 공공 임대주택을 추진한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은 화천군이 지난해 국비 66억원을 확보했으며 국비 포함 242억원을 들여 화천

읍 신읍리 일대에 70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또 화천읍 중심가인 옛 화천읍사무소 부지에 지난해부터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산천어 행복타운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타운 저층부에는 화천읍사무소가 들어섬어 상층부에는 72세대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도 오는 2027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60세대가 들어선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업비 223억원을 들여 입주자 특성에 맞춰 1층에 1000㎡ 면적의 실버복지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주택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 료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주민이 입주한다. 하남면에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주상복합시설인 스마트복합센터를 연면적 2170㎡, 지상 4층 규모의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복합센터에는 주택 15세대가 입주하고 편의점과 로컬식당 등도 갖춘다.

■공공택지조성

군은 공공 임대주택 확충과 함께 주택 신축을 위한 공공 택지 조성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우선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세권 인간동면 간척리 일대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간동세대 공존자립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택지에는 전원주택 7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내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며 곧바로 택지 조성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북한강을 끼고 있는 하남면 거려리에도 10여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원주택 택지가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사업과 함께 하남면 위라리와 화천읍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326세대를 건설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한바 있다”며 “지역군민가족에게도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에 군인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익호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1면

특별법 3차 개정안 원주 핵심의제 또 빠졌다

제안 14건 중 7건 반영 전략 차질 불가피
혁신파크 조성 등 불발 형평성 문제 여전
물환경 규제 관련 4차 포함 가능성 있어

【원주】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강원특별법의 3차 개정안에 원주 핵심 의제가 또다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과제로 총 14건을 제안했지만, 이 중 7건만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사인 인인 물환경보전법 권한 이양

추진을 골자로 한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특례가 불발된 것이 뼈아프다. 물환경 규제 지역에 한강수계기금 용도를 확대하려는 방안도 제외됐다.

결국 원주 서부권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요충지로 삼으려고 하는 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주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2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21.5km에 불과한 춘천과 달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포함돼 기업활동에 제약이 큰 상태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충북 충주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원주에 이중 삼중 규제가 덧입혀진 셈이다.

다만 환경부가 배출시설 입지 개선을 위한 별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용역 결과에 따라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한해 개발 부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완화’ 특례가 반영돼 반도체 관련 중견·대기업 유치 가능성을 높인 것은 호재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한강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상 원주가 유일하다. 강원특별법 특례 제안은 특별 대우가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인데도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강원자치도와 함께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강원산업생태계를 바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지역 16면

‘돌봄·교육·주거’ 패키지로 지역 소멸 극복

이슈 현장 화천군 신규 주거공간 확충

공공 임대주택 337세대 건립 확정·군인 아파트 협의
군, 주택 매입 이자 지원·개량 시 저금리 융자 앞선

【화천】민선 8기 화천군이 새로운 주거공간을 확충,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거주 중인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입 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문순 군수는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강력한 교육·

지, 돌봄정책에 주거 지원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로 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건립이 확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모두 337세대다. 화천읍 신읍리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주택에는 연내 120세대가

입주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 공공 임대주택 70세대는 화천읍 신읍리 일대에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옛 화천읍사무소 부지 산천어 행복타운에는 72세대가 입주한다. 사내면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60세대가 들어선다. 하남면 스마트 복합터에는 15세대가 입주한다. 국방부와 군인 아파트 건립도 협의 중이다.

■공공 택지 조성·민간주택 건설=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인 간동면에 조성하는 ‘간동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에는

70세대가 입주한다. 북한강을 끼고 있는 하남면 거려리에도 10여세대가 입주하는 전원주택 택지가 내년까지 들어선다.

최근 하남면 위라리와 화천읍에 각각 민간 사업자가 준비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총 326세대 건설 계획도 승인됐다.

■주택 구입비·주거비용 지원=화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매입하면 이자액 최대 50%를 지원한다.

향후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또는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단독주택 신축·노후 주택 개량 지원=농촌 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일부 비용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 융자를 앞선하고 있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 농촌 주택으로,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이며 증축과 리모델링, 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장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사설/칼럼 19면

선거구 확정 안 하고 ‘대진표’ 짜는 ‘정치 코미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기본 틀인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진표를 짜는 ‘정치권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원주갑에 현역인 박정하 국회의원을, 원주을에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단수 공천했다.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서는 역시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유상범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이날 발표에서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강원지역 8개 지역구 가운데 5곳의 공천 심사를 마치고, 원주갑과

강릉의 경선을 진행 중이다.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상당수 유권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후보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디인지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21대 총선은 선거일 39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다. 후보자들은 그들대로 속이 타들어 가고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질수록 그동안 이름이 알려진 현역 의원은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다. 유권자들도 후보를 검증할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정은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참정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모두 후보자가 될 ‘운동장’ 정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선수’ 선발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회도 벌였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를 거쳐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도 이뤘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선거구 확정 방식으로 강원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서부터 24년 동안 다섯 번 변했다.

특히 15대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갑·을로 구분돼 전체가 13석이었지만 2000년 16대 선거에서 9석으로 줄면서 큰 변화가 일었다.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는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붙여지며 ‘대의 정치’ 의미가 사라졌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의석수 감소 및 누더기 선거구가 되풀이되는 이유다. 21대 선거에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이라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등장했다. 춘천시는 단독 분구의 요건을 갖췄지만 접경지역 인구가 모자라 춘천북부지역의 일부(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를 떼 철원, 화천, 양구에 붙인 새로운 선거구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을 만들었다. 선거구 재확정이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4·10 총선 코앞, 선거구 확정은 ‘오리무중’

‘지역구, 선거일 1년 전 결정’ 법조항 유명무실
유권자 판단 돕도록 조속히 매듭지어야

江原日報

2024년 02월 20일 (화)

사설/칼럼 19면

강원지역 철도망 사업, 국가 계획에 꼭 반영돼야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할 일반철도 사업, 올 5월까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전국 광역지자체의 건의를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개 후보노선, 5개 핵심 노선 반영 총력전에 나섰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계획에 포함돼 국비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현안들이라는 의미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놓고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 도민 등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원주~춘천~철원 종단 철도는 원주에서 춘천까지 50.7km 구간과 춘천에서 철원까지 69.3km, 총 120km를 잇는 사업이다. 영서 내륙지역과 충청·영남·호남을 직결하며 사업비는 2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GTX-D 원주 연장을 확정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실패하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제천~영월~태백~삼척 철도는 서울 청량리와 폐광지를 관통해 영동 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시멘트, 수소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사업비는 3조5,055억원에 달한다. 연천~백마고지 전철화 사업은 경기 동두천, 연천과 철원 신탄리, 백마고지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동두천~연천 20.7km 구간은 지난해 말 전철화가 완료됐으나 연천~철원 20.6km 구간은 2018년 7월 이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비는 1,792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 상 막대한 사업비는 큰 부담인 탓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철도 인프라 건설은 속도와 지속 가능성이 생명이다. 또한 지자체의 미래 재정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진을 하더라도 일정이 계획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의 정교한 사업 진행 계획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전향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국가 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국토 계획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사설/칼럼 19면

의사들, 국민과 싸우려 하나

-의대 증원 사회적 공감... 의료대란 막아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 의료대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병원' 등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19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상당수 의사가 현장을 떠나 혼란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비상 진료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집단사직이 이어질 경우 환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지역 병원 전공의도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강릉아산병원 소속 전공의 2명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도 40명 안팎의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병원 내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양상입니다.

의료계는 앞으로도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해 불안이 증폭됩니다. 대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 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합니다. 도내 대학을 포함해 전국 의과대생도 집단 휴학을 결의하는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환자들 이 진료와 치료, 수술을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됩니다.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큽니다. 건강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논리는, 국민을 설득할 만한 뚜렷한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방식의 투쟁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장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의사들은 '대정부 투쟁'이 아닌 '대국민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반감을 부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안정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의사들의 주장처럼 정원 확대가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조건이 아닐지라도, 필요 불가결한 대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의료 수가 문제와 의사들에 대한 처우, 기피 과에 대한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의사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창구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사설/칼럼 19면

전환기 이끌 역량있는 인물로

-오늘 통합강원대 총장 선출, 지역미래 달려있어

오늘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통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갈 제13대 강원대 총장을 뽑습니다. 6명의 교수가 출마해 강원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 주관으로 세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 오전 후보자 전체 합동연설회에 이어 투표에 들어가 1,2순위 임용 후보자를 뽑습니다. 대개 1순위 후보자가 총장이 되므로 실상 오늘 차기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차기 총장은 2026년 출범하는 거대규모의 통합 강원대학교를 이끌어갑니다. 내적으로는 교육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립대학교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환기를 이끌어야 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조정력과 혁신성 양 측면을 갖춘 역량 있는 인물이 선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투표권은 학내 구성원에 제한되지만, 통합강원대 역할과 기능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기에 도민 관심이 높습니다. 마침 2월 16일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순조롭게 통합 일정이 추진 중이긴 하지만, 좀 더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차기 총장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에 자리하고 있는 각 캠퍼스 특성에 맞춰 육성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교육서비스 수준을 높여 내로라하는 대학 순위에 들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 품질은 교수진,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행정지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졸업생 취업률을 올려야 하는 당장의 과제도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통합강원대 출범을 전제로 정부의 글로벌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됐기에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전환기에서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은 대학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가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둔 방식입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은 물론 열악한 공공의료와 같은 보건문제도 주도로 해소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가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고 지역 간 소득 격차를 벌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원대의 발전 정도는 지역과 연동돼 있습니다. 강원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적임자를 선출하길 바랍니다.